

한중경제포럼

제22-02호 2022년 7월 15일

코로나19 지역확산 이후 중국경제 현황과 정책 대응

2022년 제2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코로나19 지역확산 이후 중국경제 현황과 정책 대응
2. 일 시: 2022. 6. 29 (수) 15:00~17:30
3. 발표자: 중국국가신식중심 주바오량(祝宝良) 주임

1. 2022년 중국경제 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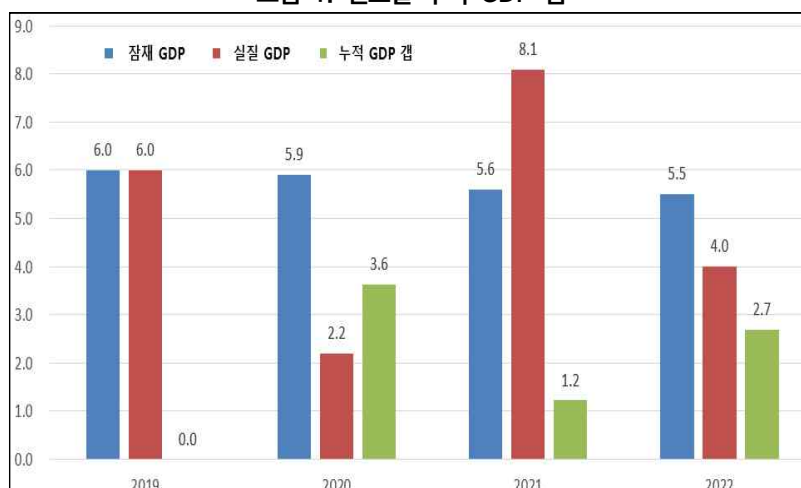
- 2022년 중국경제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예상을 초월함.
 - 코로나19가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경제적 충격을 주었으며, 잠재 GDP 성장률을 6% 내외에서 5.5% 내외로 하락시킴. 실제 GDP와 잠재 GDP 간에 여전히 갭이 존재함.
 - 2020~21년 중국의 2년간 평균 GDP 성장률은 5.1%임. 만일 2021년 이후 부동산 규제, 전력 공급 제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등의 영향을 제외한다면 실제 GDP 성장률은 5.3~5.4%에 달할 수 있었음. 중국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에서 모두 성과를 달성함.
 - 경제총량으로 볼 때,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기저효과는 2021년에 기본적으로 사라짐. 2020~21년 두 해의 평균 분기별 GDP 성장률은 동기 대비 큰 차이가 없음, 그러나 제조업투자나 부동산투자 등 세부 항목의 지표에는 여전히 비교적 큰 기저효과가 존재함.

- 2021년 하반기 이후 정책 면에서 '구성의 오류'와 '분해의 오류'가 발생하고 거기에 코로나19, 홍수 등이 겹치면서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심리 악화라는 삼중고에 처하게 됨.
- 2022년 양회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에는 2022년 3월의 오미크론 확산과 러-우 전쟁 발발의 영향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음. 이 두 가지 요인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표 1. 2021년 주요 경제 지표 (2020~21년 평균 증가율, %)

	2021년 1분기	2021년 2분기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2020~ 21년	2022년 1분기 (동기대비)	2022년 4월 (동기대비)	2022년 5월 (동기대비)
GDP	5.0	5.5	4.9	5.2	5.1	4.8	-2.2	-0.5
1차산업	2.3	5.4	5.5	5.2	5.1	6.0		
2차산업	6.1	6.1	4.8	4.6	5.3	5.8		
3차산업	4.7	5.1	4.9	5.6	5.0	4.0		
공업부가가치	6.8	6.5	5.4	5.4	6.1	6.5	-2.9	0.7
서비스 생산	6.8	6.5	5.1	5.5	6.1	2.5	-6.1	-5.1
고정자산투자	2.7	4.4	4.0	3.9	3.9	9.3	1.8	4.5
인프라투자	1.6	2.2	0.6	0.4	0.4	8.5	4.7	7.9
제조업투자	-1.5	2.6	3.6	5.4	5.4	15.6	6.4	7.1
부동산투자	7.7	8.3	7.2	5.7	5.7	0.7	-10.1	-7.8
사회소비재	4.1	4.6	3.0	4.1	4.0	3.3	-11.1	-6.7
수출(달러)	13.7	14.4	16.3	20.0	16.0	15.8	3.9	16.9
수입(달러)	11.5	13.8	14.0	14.2	13.4	9.6	0.0	4.1

그림 1. 연도별 누적 GDP 갭



- 2022년 1분기 GDP 성장률은 4.8%임. 그중에서 1~2월의 기여도가 3.5%p 내외임.
 - 산업별 성장률은 1차 산업 6.0%, 2차 산업 5.8%, 3차 산업 4.0%였음.

- 소비, 투자, 순수출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각각 3.3%p, 1.3%p, 0.2%p였음.
- 4월과 5월의 GDP 성장률은 -2.2%, -0.5% 내외로 추정됨.

표 2. 3대 수요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p, %)

	소비	자본 형성	순수출	GDP
2020. Q1	-4.3	-1.4	-1.1	-6.9
2020. Q2	-2.3	4.9	0.6	3.1
2020. Q3	1.4	2.2	1.3	4.8
2020. Q4	2.6	2.5	1.4	6.4
2021. Q1	11.6	4.5	2.2	18.3
2021. Q2	6.1	1.0	0.8	7.9
2021. Q3	3.9	-0.1	1.1	4.9
2021. Q4	3.4	-0.5	1.0	4.0
2년 평균(%)	2.4	1.6	1.1	5.1

- 공업은 정상적인 수준을 회복함.
 - 2021년 전년 대비 9.6% 증가하고 2년 평균 6.1% 증가했으며, 설비 가동률은 역대 높은 수준을 기록함.
 - 2022년 1~5월 공업은 3.3% 성장하고 설비 가동률은 떨어짐. 4월의 설비 가동률은 2.9% 하락함.
- 3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음.
 - 3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2020~21년 2년 평균 5.0% 성장함. 2015~19년 평균 성장률은 7.5%임.
 - 2021년 서비스 생산지수는 13.1% 상승하였고, 2년 평균 서비스 생산지수는 6.1%임. 2022년 1~5월의 서비스 생산지수는 -0.7%임. 4월과 5월 각각 6.1%, 5.1% 하락함.
 - 숙박·음식점업은 아직 2019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PMI 지수로 보면, 공업과 서비스 생산은 2021년 4분기부터 안정되기 시작하였고 2022년 1월과 2월에 소폭 상승했다가 3~5월에 다시 하락함.
 - 4월 하락폭은 2020년 우한(武漢) 코로나19 발생 시기보다 작으나 회복 속도는 2020년보다 느림. 이는 경제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것을 설명함.

□ 소비, 부동산투자, 수출이 감소하였고, 인프라투자와 제조업투자가 증가함.

- 투자는 안정세를 보임. 2021년 전년 대비 4.9% 증가하고 2년 평균 3.9% 증가함. 2022년 1~5월의 투자 증가율은 6.2%, 그중에서 4월은 1.8% 증가함.
- 부동산투자는 예상을 웃돌고 있음. 2021년 전년 대비 4.4% 증가하고, 2년 평균 6.4% 증가함. 그러나 9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함. 2022년 1~5월에 4.0% 감소하였음. 4월과 5월의 부동산투자는 각

각 10%와 7.8% 감소함.

- 인프라투자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2021년 전년 대비 0.0% 증가하고, 2년 평균 0.4% 증가함. 2022년 1~5월에 6.7% 증가함.
- 제조업투자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1년 전년 대비 13.5% 증가하고, 2년 평균 5.4% 증가함. 2022년 1~5월에 10.6% 증가함.

- 소비의 회복이 느림. 2021년 전년 대비 12.5% 증가하고, 2년 평균 3.9% 증가함. 2022년 1~5월에 1.5% 감소했으며,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 3월, 4월, 5월의 소비 증가율은 각각 -3.5%, -11.1%, -6.7%로 대폭 하락함.

- 수출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 증가율은 크게 떨어짐.

- 달러 기준으로 계산할 때 수출은 2021년 전년 대비 29.9% 증가하고, 2년 평균 16.0%(실질 15%) 증가함. 수입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하고 2년 평균 13.4%(실질 8.0%) 증가함. 무역 흑자는 26.4% 증가함.
- 2022년 1~5월 수출은 13.5%(실질 1% 내외) 증가하였고, 수입은 6.6% 증가(실질 7% 내외 감소)함. 무역 흑자는 43% 증가함.

- 재고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임.

그림 2. 제조업/비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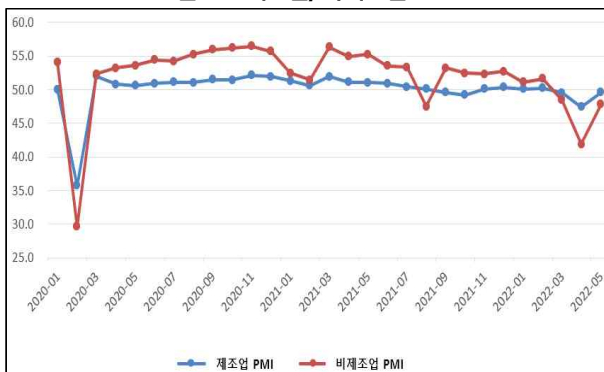


그림 3. 규모 이상 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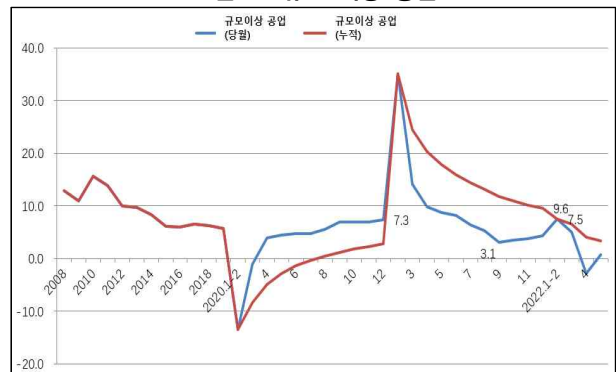


그림 4. 고정자산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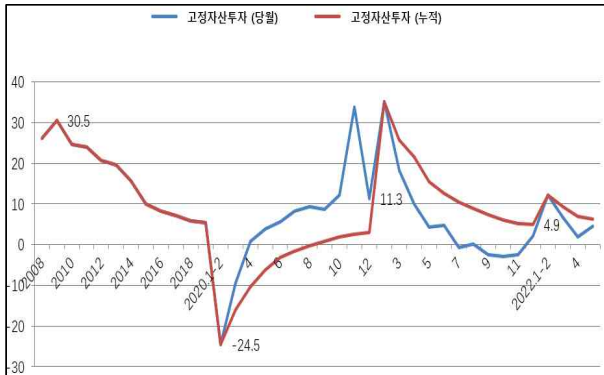


그림 5. 사회소비재 소매판매액



그림 6.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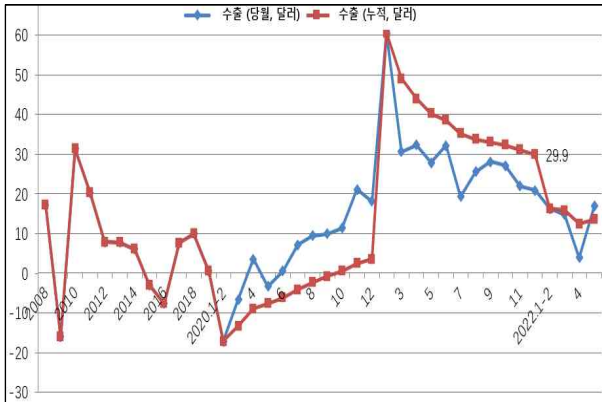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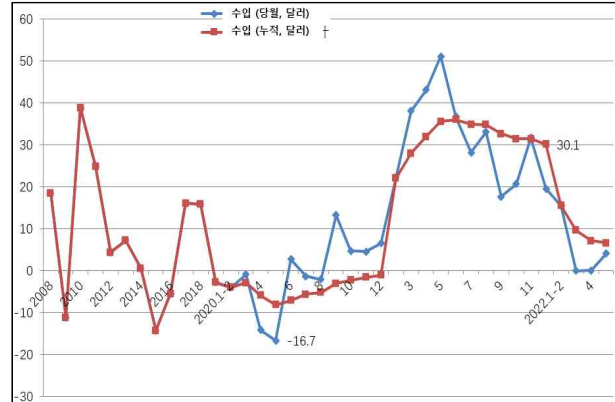


그림 7. 수입



□ 취업 압력이 비교적 높음.

- 음식점, 관광, 레저, 문화, 가사, 물류 등 노동집약형 업종이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음. 이들 업종에서의 일자리가 감소함.
- 2021년 신규 취업자 수는 1,269만 명으로, 2020년보다 83만 명 늘어남.
- 2021년 12월의 조사실업률은 5.1%이며, 그중에서 16~24세의 실업률은 14.3%임. 2021년 평균 실업률은 5.1%로 2020년보다 0.5%p 하락함.
- 2021년 농촌이주노동자(농민공) 수는 1억 7,172만 명으로 2020년보다 213만 명, 2019년보다 253만 명 감소함.
- 2022년 1~5월의 신규 취업자 수는 52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만 명 감소함. 5월 조사실업률은 5.9%이며, 그중에서 16~24세의 실업률은 18.4%로, 통계치가 발표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 근원물가지수(Core CPI)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은 코스트 푸시(Cost push)와 해외 유입으로 인한 것임.

- 중국은 공급측의 회복이 수요측보다 빠름.
 - 생돈의 생산이 회복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연속 19개월 상승한 후 2020년 9월부터 전월 대비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 11월부터 다시 전월 대비 상승하기 시작함.
 - 공업제품 가격은 2020년 10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함.

-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0.9% 상승함.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동기 대비 0.8% 상승함. 2022년 1~5월 CPI는 동기 대비 1.5% 상승하고 근원물가지수는 1.1% 상승함.
- 2021년 공업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8.1% 상승함. 2022년 1~5월 PPI는 동기 대비 8.1% 상승함.
- 2021년 상품주택가격은 2.8% 상승하였고 4월부터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됨. 2022년 1~5월 상품주택가격은 8.9% 하락함.
- 2021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은 각각 4.2%, 13.1% 상승함. 수입가격의 상승이 중국 공업제품의 가격 상승에 1.8%p 영향을 미침. 2022년 1~4월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은 각각 10.3% 내외, 14.5% 내외 상승함.

그림 8. CPI 및 P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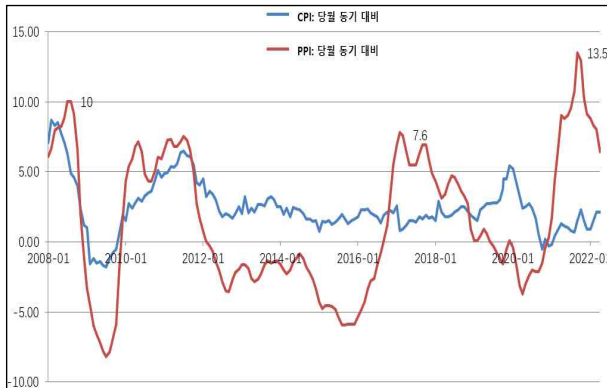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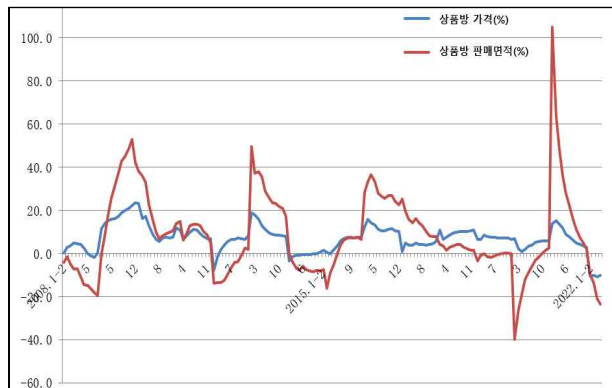


그림 9. 상품주택 가격



2. 2022년 중국경제 발전에 존재하는 문제

□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심리 약화의 삼중고가 확대됨.

- [수요 위축]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계속 시행하면서 4월과 5월에 소비회복이 느리고, 부동산 판매와 투자가 부진하고 토지구매 면적이 감소함. 수출 증가속도가 둔화됨.
 - 경제무역 관계는 비교우위에 기반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호신뢰, 가치관 및 국가안보에도 기반함.
- [공급 충격] 반도체 칩 부족, 석탄 부족, 전기 부족, 컨테이너 부족, 노동력 부족 등 문제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국내 코로나19 방역 조치, 러-우 전쟁 등 영향으로 공급면에 대한 충격이 더해짐.
 - 국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병목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와 인력이동이 '부족'에서 '정체' 상태로 전환됨.
 - 러-우 전쟁 발발 후 원자재(初级产品) 가격의 상승으로 다운스트림 산업에 대한 충격이 확대됨.

- 미국·유럽 국가들의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글로벌 산업망의 관건 부분에서 부품공급 단절과 기술제약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기대심리 약화] 기업, 가게, 그리고 일부 간부들의 자신감이 부족하며, 핵심문제는 자본의 신호등(红绿灯)을 설치(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규제)하는 문제임.

□ 코로나19 방역의 난이도와 비용이 우한 코로나 시기와 다름.

- 2020년 1월 우한 봉쇄 해제 이후의 바이러스와 비교할 때, 2022년 3월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하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으며, 유행성 질병조사와 역학 조사가 어려워 제로코로나 난이도가 높고 각 지역에서 핵산검사 상시화와 엄격한 봉쇄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상시화 핵산검사의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임.
- 올해는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열리고 각급 당정 간부들이 교체되는 해임. 방역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므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현저히 강화되고 따라서 인적 이동과 물류가 더 크게 영향받게 됨.

□ 중국경제가 처한 발전단계가 이전과 다름.

- 2020년 이전에 중국경제는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했음. 그러나 2021년 하반기에 중국경제는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심리 약화 삼중고에 처하게 됨.
- 2021년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최적화함. 공동부유,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경제·금융 리스크 예방, 경제안보 등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정책 면에서 '구성의 오류'와 '분해의 오류'가 발생함.
 - 부동산 조절 정책, 3대 마지노선¹⁾, 2개 집중²⁾, 2개 상한³⁾, 지방정부의 음성 채무
 - 에너지 환경 정책, 에너지 이중통제, 탄소피크·탄소중립, 철강 등 산업의 이중 제한
 -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정책, 플랫폼 반독점, 데이터안보, 인터넷금융, 게임산업, 교육 쌍감(双减)⁴⁾, 의료, 예술, 뉴스 보도 등
 - 공동부유 전략: 소득분배, 재산권 보호
- 2018~19년에 경제정책 면에서 조세 개혁과 감세 정책을 시행하였고, 당시 미중 무역분쟁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형세하에 6대 안정⁵⁾과 6대 보장⁶⁾을 제기하였음.

1) 3대 마지노선: ①고객 계약금을 뺀 자산 대비 부채 비율 70% 미만 ②순부채 비율 100% 미만 ③단기부채 대비 현금 보유 비율 100% 이상

2) 2개 집중: ①토지판매(土地出让) 공고를 집중적으로 발표 ②토지판매(土地出让) 절차 집중적으로 진행

3) 2개 상한: 은행기관의 부동산 대출 비중의 상한선과 개인 주택담보 대출 비중의 상한선

4) 쌍감(双减): 사교육비와 숙제의 부담 줄이기

5) 6대 안정(六穩): 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시장기대의 안정

- 2018년 5월 부가가치세 제도개혁을 시행, 7월 개인소득세 개혁⁷⁾과 영세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등을 시행함. 감세 규모는 2018년 1.3조 위안, 2019년 2.36조 위안, 2020년 2.5조 위안, 2021년 1.1조 위안이었음.
- 2018년 7월 경제 운영에 안정 속의 변화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6대 안정을 제기함. 2020년 4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6대 보장을 제기함.
- 2018년 11월 1일, 시진핑 주석은 민영기업 좌담회를 개최함. (2018년 초 민영기업 퇴장론)
- 2020년 1월 15일,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함.

□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의 강도가 다름.

- 2020년 4월, 주민취업, 기본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망·공급망 안정, 기충운영 등 6대 보장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상대적으로 완화된 통화정책을 실시하였고, 기충과 기업에 직접 조달되는 재정·통화정책 수단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특별국채를 발행하였음. 2020년 GDP 대비 광의의 재정적자 비중은 8.4%에 달했고, 토지판매(土地出让) 수입과 기금지출은 각각 15.9%, 28.8% 증가함.
- 2022년 GDP 대비 광의의 재정적자 비중이 5.8%에 그치고, 토지판매 수입은 역성장하였으며, 신용대출과 사회용자규모의 증가 속도는 모두 2020년보다 둔화됨.

□ 국제 경제·정치 환경이 다르고, 미국·EU의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되었으며,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됨.

- 미국은 노동, 무역, 투자, 금융, 과학기술, 안보 등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중국의 경제발전과 빠른 추월을 전방위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글로벌 산업망이 재편되는 추세임. 국가와 생명 안전에 관련된 산업들이 본국으로 회귀하였고, 산업이 점차 분산화·다원화·지역화되는 특징을 보임.
- 전 세계 인플레이션 상승 및 러-우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식량 등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중국 기업의 수출과 생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 및 재정 정책에 출구전략이 나타나면서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함.
- 세계경제가 영향을 받음.
 -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1월에 올해 세계경제 전망치를 원래보다 0.5%p 낮춘 4.4%로 하향 조정했다가 4월

6) 6대 보장(六保): 주민취업, 기본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망·공급망 안정, 기충운영임무의 보장

7) 개인소득세 징수기준 상향 조정 및 6가지 세액공제 항목 추가

에 3.6%로 재차 하향 조정함. IMF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 → 4.0% → 2.8% → 1.7%로 하향 조정함(2000~08년과 2008~19년 미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각각 2.7% 내외와 2.2% 내외였음).

- 환율, 상품가격, 자본이동(資本回流), 자본가격 조정, 수출, 해외용자, 해외자산 안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경제가 영향을 받음.
 - 예를 들어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유가가 50% 정도 상승하여 100달러/배럴을 유지하고 식량 가격이 25%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중국경제는 0.2%p 하락할 것임.
- 중국 자신의 일을 잘 해결해야 함. 경제 운영이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해야 하고,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하며, 금융의 양방향 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용자와 자산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함.

3. 2022년 중국경제 형세 전망

□ 양회에서 확정한 2022년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 2022년 필요한 재정적자와 지방정부 특별채권 한도를 유지함. 재정적자 규모는 작년보다 2,000억 위안이 감소한 3조 3,700억 위안으로 적자율은 2.8%이며, 특별채권 발행 규모는 3조 6,500억 위안임.
- 특정 금융기관의 상납 이윤이 1조 6,500억 위안으로, 그중에서 중앙은행이 상납하는 외환이윤이 1조 위안 이상임.
- 일반예산지출 규모는 26.71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함. 이는 2020~21년보다 1.5% 높은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1.2%p 견인할 수 있음. 자금이 기층에 직접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을 도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취업과 민생을 보장할 것임.
- 1조 위안에 달하는 2021년 이월 특별채권을 전부 사용한다면 인프라투자 성장을 7% 정도 견인할 수 있음.
- 감세규모는 1조 위안에 달하고, 공제세액 환급 규모는 1.5조 위안에 달하며, 태양광발전 기업에 지원하는 3천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 완료할 것임.

□ 2022년 5.5%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관한 추산

- 2020~21년, 5.1%의 성장률 중에서 소비가 2.4% 견인(그중 주민소비와 정부소비가 각각 2%p, 0.4%p 차지), 자본형성이 1.6%p 견인(그중 부동산, 인프라, 외자, 제조업이 각각 0.6%p, -0.2%p, 0.1%p, 1.1%p 차지함), 순수출이 1.1%p 견인함.

- 2022년 거시경제정책에 근거하여 정부지출 증수 1.3, 감세증수 1.2로 계산하면 정부 일반예산 지출, 인프라 투자, 감세·퇴세·보조금 지급이 경제성장률을 각각 1.2%p, 0.5%p, 0.5%p 견인하며 총 2.2%p의 경제성장률 견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리고 주민소비가 2.0%p, 제조업 등 투자가 1.1%p, 순수출이 0.2%p, 외자와 부동산이 0%p 견인하면 경제성장률이 5.5% 내외 수준에 도달하게 됨.
- 러-우 전쟁 등 영향을 고려하면 2022년 경제성장률이 4.0% 내외일 것으로 예상됨. 2분기, 3분기, 4분기 성장률은 각각 0~1%, 5% 내외, 5.5~6.5% 정도로 예상됨.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이탈하게 됨.

4. 2022년 중국경제 정책 방향

□ 2022년 중국경제 정책을 제정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음.

-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경제정책의 안정보다 더 중요함.
-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중요함.
- 통화정책은 국제경제보다 국내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함.
- 소비 진작이 투자 진작보다 더 중요함.
- 고용 안정이 물가안정, 환율 안정보다 더 중요함.

□ (2022.4.29) 1분기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경제업무에 대한 연구를 진행

- 코로나19 확산 억제, 경제안정, 안전한 발전의 3대 요구를 제기함.
- 성장 안정, 고용 안정, 물가안정의 3대 거시조절 목표를 제기함.
- 거시정책의 조절 강도를 확대함.
 - 이미 확정된 정책의 실행을 촉진하고, 양적 확대 정책 도구를 조속히 기획하며, 형세 변화에 따라 정책 유연성(相機调控)을 높이고, 목표지향적 원칙을 전제로 정책에 대해 사전평가를 진행하며 비정상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여지를 두어야 함.

- 시장주체 안정, 코로나19의 타격을 심하게 받은 업종과 중소·영세 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정책을 시행함.
- 공급측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재중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비즈니스 편리화 요구에 응함으로써 대외무역과 외자의 펀더멘탈을 안정시킴.

□ (2022.5.23.)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일련의 패키지 정책을 발표(6개 방면, 33개 조치 포함)

- [재정정책] 세금환급 규모를 1,400억 위안 늘려 연간 2조 6,400억 위안에 달하도록 함. 3대 사회보험료 3,200억 위안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함. 실업보험·직원교육 보조금 혜택 대상을 사회보험에 가입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함. 특별채권을 8월 말 이전에 사용함. 국가융자담보펀드(2018년 6월 설립, 2021년 7,500억 위안 증가, 누적규모 1.3조 위안)를 1조 위안 이상 증가시킴. 영세기업에 대한 물·전기·가스 요금 및 주택임대 지원
- [금융정책] 포용적 소액대출 지원 한도 및 비율을 두 배로 증대시키고, 신규 대출보조금 비율을 2%까지 확대함. 중앙기업이 900억 위안의 화물차대출을 발급하고, 중소·영세기업 대출, 주택대출금과 소비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연기해 줌.
- [산업·공급 사슬 안정] 민용항공 대출 1,500억 위안 및 채권 2,000억 위안 발행하고, 화이트 리스트 기업(조업재개 명단 선정 기업)을 선정함.
- [소비 및 유효 투자 안정] 연말까지 600억 위안 규모의 자동차 취득세(취득세의 17% 차지)를 감면함. 주거 수요를 지원함. 인프라 투자면에서 3,000억 위안 규모의 철도채권을 발행하고, 이공대진⁸⁾에 초점을 둠.
- [에너지 안보] 석탄 생산량 책임제를 확실하게 실행함. 심사 후 석탄생산량을 확대함. 수력·석탄 발전 프로젝트를 착공함.
- [민생 정책] 사회 구제의 표준을 물가 수준에 맞게 조정함.

□ 시장진입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신호등)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민간투자를 장려하며, 시장 기대를 안정시킴.

- 플랫폼경제 발전과 반독점 문제: 특별 정돈을 완성하고 상시화 감독·관리를 시행함.
- 인터넷금융, 신용정보 서비스를 포함

8) 이공대진(以工代賑): 프로젝트를 통해 실직·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들을 구하는 방식

- 인터넷 데이터 안보

- 코로나19 방역정책을 흔들림 없이, 주저 없이 추진함.

□ 재정정책을 강화하고, 재정의 양적 확대 수단을 기획함.

- 재정지출 및 특별채권 발행의 속도를 높임.

- 재정지출 구조를 조정함.

-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방역 특별국채를 발행함.

- 시장주체, 취업, 소비의 안정과 민생 보장, 인프라투자 견인에 사용하고 또한 부동산기업의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환급에도 사용함.
- 재정지출 승수 1.3, 감세승수 1.2 내외로 계산하면 경제성장률을 0.5%p 정도 견인하는데 재정지출 2조 위안 정도 확대가 필요함.

□ 통화정책을 강화해야 함.

- 통화정책은 합리적인 유동성 공급을 보장해야 함.

- 기준율 인하, 중기유동성창구(MLF) 등의 수단을 통해 유동성을 제공하고, 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함. MLF 금리와 대출우대금리(LPR)를 적절하게 인하함.

- 어려움에 처한 업종, 영세기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보조, 포용성 대출을 제공함.

- 불가능의 삼각정리(트릴레마)에 따라 유연한 환율정책을 시행함.

□ 내수 확대

- [소비 정책]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어려운 가정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국 범위의 소비쿠폰을 발급함(디지털 화폐 활용).

- [인프라 정책] 지방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실행하고, 지역의 중대 전략과 지역협조 발전전략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조화롭게 촉진함.

- [부동산 정책] 일선 도시와 일부 이선 도시의 토지 공급을 확대하고 보장형 주택 건설을 확대함. 도시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며, 구매를 장려함.

- 예약판매금 동결 문제는 예약판매허가증 수량기준이 아니라 판매금액 비율 기준에 따라 적용함.
- 3대 마지노선과 2개 상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함.

□ 민생을 확실하게 보장·개선함

- 고등 직업학교와 대학교의 입학생 모집인원 수를 늘리고, 취업을 늦춤.
- 출산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함.

질의응답(Q&A):

Q 1. 발표 내용 중에 올해 하반기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2조 위안 정도의 특별국채 발행과 재정적자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중국의 경우 재정적자율이나 특별국채는 보통 양회에서 결정하고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하반기에 양회의 결정이 없이도 가능한지?

A 1.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우리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문제임. 우선 이 문제는 입법에 관련된 문제임. 중국의 법률에 따르면 일반적인 재정적자 예산은 매년 3월 5~15일경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결정됨.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리는데 3월 개회 이후에 재정적자 등 관련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살펴보면, 중국은 일반예산 외에 기금예산도 있음. 기금예산은 예전에 없었는데 나중에 토지출양(토지판매)이 가능해지면서 토지 부분을 기금예산에 포함하게 되었음. 그리고 지방정부의 특별채권은 나중에 토지를 판매한 돈으로 상환하게 됨. 특별채권도 기금예산에 포함됨. 기금예산에 대한 요구는 일반예산과 달리 그리 엄격하지 않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그러므로 적자율과 관계없이 기금예산으로 분류되는 방역 특별국채를 발행하면 됨. 이러한 부분은 양회를 거치지 않고도 발행할 수 있음. 그리고 중국에는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수출입은행 등 정책성 은행들이 있음. 이러한 정책성 은행들은 정책성 대출금을 제공할 수 있음. 개인적으로 볼 때 정책성 대출금 배후의 담보도 재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음. 올해 5월에 국무원상무회의에서 발표한 33개 조치 중에 정책성 은행들이 올해 신규 대출을 8천억 위안 확대하여 인프라건설 투자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음. 기금예산은 매칭되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함. 우리는 소비쿠폰을 발행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없음.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 우리는 이미 이 내용과 관련하여 제안을 올렸고 올해 하반기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제가 법률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잘 몰라서 우리 기관 내 인민대표에게 문의도 해 보았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음. 그리고 양회에서 확정된 일반예산 내 재정적자율은 각 성 지역으로 배분하게 됨(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논증된 것이 아님). 다시 말해서 전국적인 적자율 목표가 있고, 각 성에 해당하는 지표가 따로 있음. 보통 일반 채무와 지방정부의 특별채권을 포함하며, 각 성은 지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됨. 현재 중국의 31개 지역은 모두 자체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고 한도가 남아있음. 우리는 각 지역에서 자체 한도 내에서 소비쿠폰을 발행해도 된다고 제안한 바 있음. 그렇게 되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치지 않아도 됨.

Q 2. 현재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지난 5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1% 상승함.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나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지수로 크게 전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A 2. 현재 중국의 PPI 상승률은 매우 높은 반면 CPI 상승률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임. 특히, 중국의 근원인플레이션율(에너지 및 농산물 제외 지수)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그 주요 원인은 수요부족(소비 부족)임. 소비 회복이 매우 느리고 방직품, 가전제품, 휴대폰 등 공산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음. 유가가 오르고 있으며, CPI가 근원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두 번째 요인은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는 것임. 5월 말부터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음. 세 번째 요인은 공급측 문제임. 작년 7~8월에 석탄 가격이 상승하여 전기공급 제한 사태가 발생했음. 그 후 에너지 주관부처인 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이와 관련해 빠르게 두 가지 대응조치를 취하였는데 첫째는 중점 석탄기지의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석탄과 전기 가격을 연동시키는 조치임. 이전에는 전기 가격을 못 올리게 제한했는데 석탄 가격이 1톤당 600위안에서 2,000위안까지 상승하면서 거의 모든 전력기업이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전력기업들이 전기 생산을 중단했음. 발개위는 작년 8월부터 가격 메커니즘을 개혁하여 전기가격과 석탄가격을 연동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함. 철강, 유색금속 등 기타 원자재 가격은 중국 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음.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연속 2년간 마이너스 성장하였고 철강소비도 감소하였음. 철광석 등 원자재의 가격은 사실상 크게 오르지 않았음. 가격이 오른 것은 석유와 천연가스임이며 이 두 가지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원자재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전달되는 효과가 미미함. 현재 중국의 PPI가 8.1%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유럽에 비해 상승폭이 완만한 편임. 현재 근원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통화정책이 물가에 크게 초점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Q 3. 현재 산업망·공급망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물가와도 연결되고 중국의 경제성장 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인데 중국의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간략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지?

A 3. 올해 국제환경은 2020년의 상황과 다름. 2020년 당시에는 대부분 나라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있었음. 그때 미국이 일부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고 미·중 관계 면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난 2년간 글로벌 산업망 안정면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함.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혁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압박을 가함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00억 달러 정도 줄었다고 함.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때와 달리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미국·유럽이나 한국,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위드코로나를 실시하고 있고 해당 국가들의 산업망이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음. 그리고 러·우 전쟁 발발 이후 국제형세의 변화를 볼 때 미국과 EU가 앞으로 중국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음. 새로운 환경하에 현재 미국과 유럽은 산업연맹을 추진하고 있음. 얼마 전에는 동남아 국가들이 참가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함.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중국의 산업망·공급망에 변화가 생길 것이며, 그리고 코로나19 종결에 따른 변화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함. 각 나라들이 생명 안전에 관련되는 산업을 해외에서 철수하는 데 관한 법률을 제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이 중국에 있던 의약품 산업을 철수하는 사례는 이미 발생하였음. 기업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 지역에서 산업망을 구축하는데 최소 8~10년 정도 필요하며, 산업망을 철수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결린다고 함. 우리는 대기업들이 향후 산업망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은 관심이 있으며 앞으로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핵심 분야의 병목 기술(卡脖子) 문제를 해결해야 함. 다리를 조르는 것은 걷기 힘들 수는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음. 그런 분야에서는 협력과 분업을 진행할 수 있음. 그러나 병목 기술 분야는 크게 우려되는 부분임. 최근 "经济追赶与技术跨越(Economic catch-up and technological leapfrogging)"이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음. 이 책에서 저자는 한 국가가 산업망·공급망 안전과 기술추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R&D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특허 수량 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없다고 제기함. 저자는 기술의 사이클이 짧을수록 추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시함. 그리고 중진국이 선반 등 전통기술 면에서 오랜 기간의 기술축적이 부족하지만 변화가 빠른 기술 영역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출발점에 처해 있다며 중진국이 기술추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사이클이 짧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파고들어야 하며,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 분야에서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함. 또한 저자는 한국이 중소형 국가로서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디지털경제와 신에너지 등 혁신기술 면에서 가진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기술 추격을 달성하고 선진국으로 부상한 경험을 소개했는데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음. 중국은 과거에 선반 기술 분야에 몇백억 위안을 투자하여 선양(沈阳) 선반 기업 육성정책 등을 추진했지만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현재까지 반도체 칩과 대형 항공기 분야에서 아직 기술적인 돌파가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분야는 대량의 시간 축적과 사용자 데이터 축적이 필요함. 개인적으로 볼 때 미·중 전략적 경쟁과 러·우 전쟁, 중국과 EU간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슈의 영향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런 배경하에 중국이 현재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산업망·공급망 관련 정책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음. 중국이 기술 후발국으로서 기술 추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험을 따라 배워 트랙을 바꿔서 디지털 경제와 신에너지 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새로운 분야에서 시행하는 반독점 규제를 조속히 종결짓고 디디추싱(滴滴出行)과 앤트파이낸셜(蚂蚁金服) 등 기업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함.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함. 그리고 선반, 반도체, 대형 항공기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유럽과 협력하고 싶어도 쉽지는 않을 것이며, 이러한 분야에서는 국가 역량을 모아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사회주의 제도적 우위를 발휘하여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중국이 대외개방이나 국제협력 면에서 훨씬 더 원활하게 헤쳐나갈 것으로 생각함.

- Q 4. 발표 내용 중에 EU 상공회의소 소장이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많은 서방국가들이 중국의 제로코로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부분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되기를 바라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 저도 EU 상공회의소 소장이 지적한 의견에 대해 자세히 읽어 보았는데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해 상당히 강도가 높은 비판이라고 생각함. 현재 시진핑 주석은 확고하게 제로코로나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민생이나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일부 만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들었음. (이에 대해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지만) 발표자께서는 제로코로나에 대한 EU 기업들의 의견이 건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발표자께서도 이 입장에 동조하시는 것인지? 발표자께서는 시진핑 주석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A 4. 코로나19 방역 정책은 나라마다 국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함.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하기는 어려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확정된 코로나19 방역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임.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원가와 이익에 착안하여 연구하기 마련임. 저는 한 내부 토론에서 대학교수들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한 적이 있음.

Q 5. 재정확대나 통화완화를 통해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부동산 부양 정책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하셨음. 중국은 구조적 조정 차원에서 몇 년 동안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음. 현재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뒤를 썰 거를 없이 대도시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부동산 대출 비율을 높이거나 금리를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규제장벽들을 대폭 완화하고 있음. 이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경제 부양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함. 중국이 과거 2008년에 시행한 4조 위안 부양정책으로 인한 후유증이 10년 넘게 지속되었다고 함. 현재 중국은 부채비율을 낮추고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는 등을 통해 성장 구도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현재의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 나중에 초래하게 될 후유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5. 작년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의 부동산업은 이미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제기한 바 있음. 새로운 발전단계라고 하는 배경으로는 △중국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이 41평방미터에 달해 중국 부동산 수요측의 빠른 성장이 기본적으로 종결된 것 △부동산 가계 부채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 △신도시 시민들이 임대 주택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 등이 있음.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는 했지만 房住不炒의 원칙은 변함이 없음. 즉 수요측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지만 공급측에 대한 원칙은 변하지 않았음. 특히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기업들에 대해 계속해서 3대 마지노선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몇 년 전처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자마자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임. 대부분 주민에게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념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함. 그리고 부동산세 정책도 곧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전부터 부동산세 시행이 제기되었는데 올해는 경제하방 압력으로 인해 잠시 뒤로 미루었으며 추후 반드시 시행할 계획임. 향후 중국은 부동산 면에서 부동산세 개혁과 토지제도 개혁에 관심을 두고 주시할 것임. 이 내용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 제기된 것이며 올해 열릴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것임. 개인적으로 볼 때 앞으로 부동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함.

Q 6. 현재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오늘 발표 중에서 2023년 중국의 성장 속도가 지금보다 더 느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4월 24일 상하이증시가 바닥

을 친 후 거의 20% 정도 올랐음. 주가지수가 갑자기 대폭 상승한 원인이 무엇인지?

A 6. 시기적으로 보면, 분기마다 열리는 중앙정치국회의가 4월 29일에 개최되었음. 그 당시 4월 경제지표가 이미 발표된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이 경제 운행이 안 좋은 상황에서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그리고 그 후 국무원상무회의에서 33개 조치를 발표한 것이 자본시장의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함. 4월 말 장춘(長春)시, 지린(吉林)시 등 지역의 봉쇄도 해제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중국의 제도적 특성상 정책을 일단 발표하게 되면 반드시 시행한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음. 그 외 국제요인도 있음. 현재 해외주식시장을 보면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고 미국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가 모두의 예상을 초과했고 현재 심각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음.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음. 개인적으로 예측했을 때 미국이 올해 말, 내년 초에 최소 연속 두 개 분기에 제로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며,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추세 하에 위안화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함. 국내에서는 외국인 투자상황에 대해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다고 판단되면 국내 주식시장이 바로 상승하는 것임. 최근에 북향자금(北向資金)이 많이 유입되었음. 이상의 여러 가지 원인을 결합해 볼 때 중국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함.

Q 7.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에 보면 "거시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다", 혹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됨. 물론 부문별, 산업별, 국내 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합리적인 구간에서 거시경제가 운행된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특히 올해의 경우는 성장률이 어느 범위에 있어야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A 7. 우리 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수량예측 방법으로 중국의 잠재 GDP를 계산하는 일임. 중국은 매년 양회에서 발표하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거시경제 운행의 합리적인 구간에 대한 4대 목표, 즉 경제성장률, 취업, 물가, 국제수지 등을 제시함.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필적하는 수준이면 합리적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는 주로 잠재성장률이 얼마인지, 지난 2~3년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등 몇 가지를 참고하고 있음. 그리고 올해 취업 목표는 도시조사실업률을 연간 5.5% 이내로 통제하는 것임. 제가 알기로 한국도 이와 비슷하게 자연실업률이라는 지표를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해 각국 자연실업률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중국의 경우 자연실업률이 대략 5% 정도 수준일 것으로 예상함. 물가의 합리적인 구간은 5~6% 정도의 GDP 성장률에 비취볼 때 CPI 상승률 3% 내외라고 보고 있음. 일본, 한국, 미국 등 나라들은 대부분 2%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 외에 소득, 에너지 소비 강도, 부채율 등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는데 많은 경제지표 중에서 주요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다면 거시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판단함. 만약 올해 5.5% 내외의 GDP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5.5% 이내의 실업률 목표를 달성했다면 저는 개인적

으로 합리적인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발개위의 연도보고서에도 기타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50% 이상을 달성한다면 합리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음.

Q 8. 발표 내용 중에 올해 인프라 투자와 정부소비가 주로 중국경제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돈이 넉넉해야 할텐데 올해 중국경제가 하방압력을 받으면서 정부 재정수입도 당초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됨. 얼마 전에 4월 중앙정부 재정수입이 전년대비 -40%를 넘었다는 보도 내용도 본 적이 있음. 또한 부동산경기가 부진해지면서 토지출양을 통한 정부수입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함. 정부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상황임. 감세·퇴세, 인프라 투자 등 정부 재정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 보임. 혹시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이 약화하면서 당초 기대와 다르게 정책효과가 감소한다거나 또는 부채부담으로 지방정부들의 적극성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지?

A 8. 2021년 재정적자율, 토지출양 등이 모두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중국경제가 큰 압력에 직면해 있음. 이럴 때일수록 재정,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우선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경제지표들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음. 물론 장기적인 면도 고려해야 함. 현재 우리는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의 경험에 비추어 높은 수준의 적자율 하에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지 연구하고 있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중국이 직면한 눈앞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부족과 경제성장률의 빠른 하락세라고 생각함. 경제학적으로 선택하라면 저는 경제성장을 선택할 것임.

Q 9. 발표 내용 중에 중국의 중요한 기술 또는 경제발전 방향이 디지털 경제, 신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 될 것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도체나 선반 등이 기본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고 하셨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반도체 발전을 위해 2014년부터 국가반도체펀드도 만들었고 반도체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음. 반도체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런 성과에 기반하여 앞으로는 어떤 반도체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A 9. 중국은 과학기술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들이 포함됨.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2014년 즈음에 10~15년에 걸쳐 반도체, 대형 항공기, 달 탐사 등을 추진하는 16가지 중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음. 국가 관련 부처에서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면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름. 모두가 알다시피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유인 우주비행 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리고 공신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와 기업의 연합 펀드가 있음. 민영기업의 역량이 부족하므로 정부가 연합하여 투자함으로써 이익과 손해를 같이 부담할 수 있음. 작년에 우리가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보고서를 작성할 때 2021년 중국의 5대 성과에 대해 제기하였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 성과가 과학기술의 진보임.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과학기술 면에서

뚜렷한 진보를 가져왔음. 제가 일본 인사들과 교류하는 과정에 그들이 말하기를 비록 전문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아니지만 중국의 선전(深圳) 등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과학기술 혁신 속도가 일본기업에 비해 상당히 빠른 것을 체감한다고 평가를 들은 적이 있음.

Q 10. 발표 내용 중에 중국경제가 요즘 하방압력이 증대해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융시장이나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어 통화정책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 향후 실물경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급준비율이나 MLF, LPR 인하 등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MLF, LPR 인하 여력과 공간이 얼마 정도 있는지? 충분한 여력이 있는지?

A 10. IMF 통계에 따르면 기금예산, 음성 채무 등을 모두 포함한 중국의 광의 재정적자의 총량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님. 재정 체제로 볼 때 중국과 같이 큰 나라가 통일재정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 국내에서 많은 논쟁이 있음. 독일과 미국은 연방재정 체제의 국가이고 한국, 프랑스, 일본 등 나라들이 모두 통일재정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국가 규모가 작은 편이고, 프랑스와 일본은 국가 규모가 큰 편이지만 지방정부가 재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권리를 가지고 있음. 중국은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 경우 통화정책이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중국에는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류가 너무 많고 현재 일부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재정정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함. 저는 중국의 통화정책에 충분한 여력과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리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강제적 구속력(硬约束)을 가져야지 탄력적인 구속력(軟约束)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중국 통화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은 대체 어느 것을 기준금리로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확실한 답을 못 찾고 있음. 과거 중국인민은행이 화폐를 공급하는 주요한 통로는 외화였고 국채시장의 공개시장조작이 아니었음. 그러므로 중국은 아직 단기통화시장금리가 장기국채 금리에 전달되는 수익률 곡선이 없음. 여기서 중국인민은행이 자체적으로 혁신한 것이 바로 대출우대금리(LPR)인데 LPR은 또한 중기유동성창구(MLF) 대출금리와 연동되고 있음. 7일 만기 역환매금리, MLF, LPR,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은 이론상으로 어떤 관계인지, 어느 것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아직 의문이 남아있음. 어떤 금리를 기준으로 보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통화정책 면에서 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의 여력이 있다고 생각함. 금리인하를 시행한 후 통화금리가 MLF로 전달되고 그 후 LPR로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이루어져야 하고, 통화시장금리에 따라 은행의 기업에 대한 금리가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한가지 문제는 기업의 융자통로에는 은행대출 뿐만 아니라 채권, 주식, 부외금융 등도 있음.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형성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중앙은행과 재정부 간의 조화 문제를 해결해야 함.

Q 11. 현재 중국이 소비도 안 좋은 상황이고 수출도 점점 성장이 부진해질 것으로 예상됨. 그렇다면 남은 것은

투자밖에 없고 특히 그중에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임. 중국은 올해 특별채권을 작년과 동일하게 3.65조 위안 발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최근에는 "특별채권 발행을 가속화하여 효과를 높이겠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함. 작년 이월 특별채권이 1조 위안에 달하는 특별채권 한도가 이월되었음. 이월된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중 하나가 특별채권의 수익성 특징으로 인해 채권상환 시점에 매칭되는 현금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원인이라고 알고 있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특별채권을 한도대로 발행하지 못하고 일정 금액이 이월되었는데 올해에는 특별채권이 계획대로 발행되어 중국 정부가 원하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인프라 투자가 계획대로 모두 완성될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A 11. 작년에 이월된 특별채권에 대응하는 현금흐름이 올해에는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했음. 제가 계산하기로 작년 인프라투자 자금투입 규모가 대략 13조 위안 정도임. 자금출처에 대해 일일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크게 정부의 일반예산, 특별채권, 도시투자채권(城投債), 정부의 신용대출, 그리고 토지출양금 등 몇 가지가 있음. 그중에 도시투자채권과 은행 대출은 반드시 현금흐름이 있어야 함. 이러한 논리로 분석하면 작년에 투입한 13조 위안의 자금은 모두 대응하는 현금흐름이 있음. 1조 위안에 달하는 2021년 이월 특별채권은 14조 위안 중 7% 정도임. 7% 정도면 경제성장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음. 그러나 여기서 전제조건은 도시투자채권이 모두 발행되어야 하고 토지출양금 규모도 요구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임. 올해 토지출양금이 이전에 비해 감소하겠지만 정책성 은행의 대출 증가 금액 8천억 위안으로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음.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도시투자채권의 발행상황이 좋지 못함. 개인적으로 볼 때 올해 신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인대에서 발표한 "14·5" 계획의 프로젝트 중에서 국가발개위의 기준을 거친 프로젝트들은 현금흐름이 없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음. 일부 프로젝트들이 수익이 없을 수도 있고, 재정적자율이나 기타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일반 채무로 분류시킬 것을 제안했음. 우리의 주장은 단기 내 주요 임무는 경제회복이 우선이며, 금융 리스크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함부로 아무 프로젝트나 추진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14·5" 계획 내용 중의 102개 중대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추진해야 한다는 것임. 올해 현재까지 인프라 투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앞으로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 부동산의 후유증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함.

Q 12. 오늘 아주 솔직하고 핵심을 찌르고 간결하며 열정적인 발표 감사함. 저는 질문은 아니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음. 오늘 말씀 중에 코로나19 상황에서 EU와 일본상공회의소에서 중국의 방역조치로 인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제기한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사실 한국기업들도 마찬가지임. 한국기업들도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음. 박사님께서 중국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하실 때 큰 축의 하나가 개혁개방과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이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간단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음. 지금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의 투자심리 위축을 해결하

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것이 기업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지금 중국 정부도 열심히 검토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격리기간 축소나 해외 항공편 확대 등 면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특히 일반인들의 격리기간 단축, 예전에 시행했던 한·중간 신속통로 등 투자자들을 위한 이동 편의 측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하여 정부 내부에서 토론을 진행할 때 이 내용들을 적극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12. 의견에 동의함.